

## 행정학 기출문제 2009.7.19. 서울시 9급

전반적으로 보면,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아무래도 예전 서울시 문제에서처럼 지엽적인 문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엽적인 문제보다 기본적인 주제가 출제될 경우에 많이 헛갈려 하는 내용들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지가 점수를 결정짓는다. 특히,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거나 암기했던 표현과는 다른 표현들이 지문에 나오는 경우 오답을 많이 내는 수험생이라면 단어가 아닌 의미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7월 이후에 보는 시험들의 경우 상반기 시험이 끝난 후에 누가 꾸준히 시험준비를 해왔는지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다.

- 강제명은

### 01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 ② 최근 행정의 개념에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사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 ④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⑤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 02 행정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책이 정책을 낳는 관성은 행정의 팽창을 가져온다.
- ② 행정의 과부하는 행정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 ③ 행정의 팽창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 ④ 다양한 위기 상황은 행정국가에서 최소국가로의 발전을 자극한다.
- ⑤ 행정국가는 삼권분립을 전제하지 않은 국가구성 원리이다.

### 03 보통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의 정당성은 해당 재화를 시장에 맡겨 놓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즉 시장실패에 있다. 다음 중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의 생산

- ② 전력, 상하수도 등 고정비용이 변동비용에 비해 매우 높은 자연독점 상태의 서비스 제공
- ③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식품의 유통
- ④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산업
- ⑤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 04 정부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참여적 정부모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보다 절차를 더 중시
- ② 정부관료제가 시민에 봉사하기 위해 직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희생적이고도 재능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
- ③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준자치적인 조직들이 상부로부터의 정책이나 이념적 지시에 순응할 것을 기대
- ④ 공조조직이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간에 계층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는 것
- ⑤ 특정한 정책영역에 항구적인 관할권을 지닌 전통적인 형태의 조직에 의존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신축성을 증대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게 됨을 강조

#### 05 전자정부법에서 천명된 운영 원칙이 아닌 것은?

- ①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 ②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 ③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④ 행정정보안 준수의 원칙
- 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 06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민주성과 합법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 ② 중립성은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욕구의 포기를 요구한다.
- ③ 효과성과 능률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 ④ 가외성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 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사회정의를 보장한다.

#### 07 규제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Lowi는 정책의 한 유형으로 규제정책을 제시하였다.
- ② 개인,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제한을 가한다.
- ③ 재산이나 권리를 많이 소유한 집단에게서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이전시킨다.
- ④ 환경오염, 독과점을 방지할 때 많이 사용되는 정책이다.
- ⑤ 관련 집단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 ②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③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민간부문의 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유인할 수 있다.
- ⑤ 정부가 통상적으로 연간 예산으로 건설하기에는 소요시간이 많이 드는 긴요한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

### 17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퇴직 후의 고발은 내부고발이 아니다.
- ② 조직 내의 비정치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③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내부고발은 공식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킨다.
- ⑤ 내부적인 이의제기 형식과는 다르다.

### 18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추어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② 행정통제의 기준으로는 시민의 자유보전과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③ 행정통제는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 방향에 따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눌 수 있다.
- ④ 감사원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감사기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통제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 ⑤ 행정통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은 행정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19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될 경우 선결처분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이 이루어진다.
- ⑤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행위뿐만 아니라 정책적 실수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도 주민이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방식은?

- |        |        |
|--------|--------|
| ① 주민청원 | ② 주민총회 |
| ③ 주민발의 | ④ 주민투표 |
| ⑤ 주민소환 |        |

## 행정학 기출문제 2009.7.19. 서울시 9급

### 01 ④

현대행정은 정책결정을 통한 가치배분이라는 정치과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해, 부동산 산투기 근절대책이나,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주요한 가치배분(정치)은 행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푸른 행정학, p.37이하, p.55)

### 02 ①

행정국가란 정부관료제가 국가 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를 말하며, 산업화와 사회의 분화 / 조직혁명, 대공황과 뉴딜정책, 그리고 시장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푸른 행정학, pp.23-24)

① 행정국가 현상은 행정기능의 증대와 전문성으로 인한 행정재량과 위임입법의 확대와 관련된다. 나아가, 시장실패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성에 의해 정부기능의 지속적 팽창을 낳게 된다. ② 특히,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행정에 대한 요구와 투입이 커지면서 행정의 과부하를 야기하게 된다.

③ 행정의 팽창은 정부실패를 낳으며, ④ 위기는 강한 국가를 자극하게 된다.

⑤ 행정국가에서 입법·사법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지만, 입법부와 사법부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 03 ⑤

시장실패는 시장의 가격과 경쟁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에 실패하거나, 시장의 작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푸른 행정학, pp.100-102).

- 시장의 외재적 결함 : 분배정의 확보실패(빈부격차), 가치재 문제
- 시장의 기능장애 : 실패와 인플레이션, 불완전 경쟁과 독점
-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정보와 정보비대칭성

①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가 발생하고 시장에 맡기는 경우 과소생산이 문제되며,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② 고정비용이 매우 높은 경우 진입장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독점이 발생하는 데, 독점의 경우 과소생산과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설정되어 사회적 효율성이 저하된다(하버거 삼각형).

③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④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과잉공급이나 과소공급이 문제된다.

⑤ 민간위탁은 시장원리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시장실패와 관련이 없으며, 정부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의 하나다.

### 04 ④

설문은 Perters의 뉴거버넌스 모형 중 참여정부모형을 묻고 있다. 참여정부모형은 전통적인 관

료제의 문제를 계층제로 진단하면서, 수평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푸른행정학, pp.183-185). ①②는 관료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재량을 강조하는 탈규제정부모형을, ③은 독점에 대한 경쟁 원리를 강조하는 시장정부모형을, ⑤는 지나친 신분보장규정이 낳는 문제에 대해 임시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신축적 정부모형을 담고 있다.

## 05

④

④ 행정보안이 아닌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행정보안이 아닌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전자서명/인증 기술 등)은 포함된다(푸른 행정학, p.207).

|            |                                                                                                 |
|------------|-------------------------------------------------------------------------------------------------|
| EG구현<br>원칙 | 국민편익 중심의 원칙, 행정정보 공개의 원칙,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br>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            |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br>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
| 행정관리       | 전자문서, 전자관인, 보안대책수립, 표준화, 온라인 원격근무, 공무원의 IT활용능력<br>제고, 원격교육, 문서업무감축, 지식관리, 업무재설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
| 대민<br>서비스  | 전자적 민원처리, 비방문 민원처리, 전자적 고지·통지,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전<br>자적 급부제공, 전자서명과 신원확인                           |
| 기 타        | 자치정보화조합                                                                                         |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업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법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은 내용(쉽게 말해,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06

④

① 민주성을 시민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으로 보면, 시민요구와 법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상충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푸른 행정학, p.260).

② 중립성은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업무수행에 개입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개인의 사회적 욕구의 포기와는 관련이 없다(푸른 행정학, p.260).

③ 목표달성과 비용절감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지만, 능률성을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늘여야 한다(푸른 행정학, p.251).

④ 가외성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체제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해(지문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복과 중첩을 허용하는 것이다(푸른 행정학, p.254).

⑤ 민주주의를 절차로 보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법적 보장과 공정한 선거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의 확보를 강조하며, 소극적 자유와 기회균등의 보장에 강조점이 맞춰진다. 반면, 사회정의는 분배정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지칭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분배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게 되는 데, 이는 부유한 계층의 재산권을 제약(누진율의 강화나 토지공개념 등을 생각해 볼 것)하기 때문에 절차적 의미의 민주주의와는 갈등관계에 있게 된다(푸른 행정학, p.244참조).

\* 이념간 조화와 상충에 관한 내용은 푸른 행정학, p.260

## 07

③

규제정책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1) 효과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라는 점에서 배분정책과 유사하지만, 배분정책과 달리 정책이 분할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2) 강제력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재분배정책과 유사하지만, 재산자체의 이전을 다루는 재분배정책과 달리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푸른 행정학, p.276, p.278).

③은 재분배정책의 개념이다.

|                 |    | 강제의 적용                                                      |                                                                |
|-----------------|----|-------------------------------------------------------------|----------------------------------------------------------------|
|                 |    | 개인의 행위                                                      | 행위의 환경                                                         |
| 강 제<br>가 능<br>성 | 원격 | 배분정책(관세보조금)<br>- 개별행위 대상 ; 분할가능 → 갈등부재                      | 구성정책(새 기관의 창설홍보)                                               |
|                 | 근접 | 규제정책(불공정 경쟁)<br>- 개별행위 대상 ; 분할불가능 → 갈등발생<br>- 행위규제 → 동등한 대우 | 재분배정책(누진세, 사회보장)<br>- 개인, 계층을 넘은 계급간 갈등<br>- 재산(가치이전) → 평등한 소유 |

## 08

⑤

③ 정책네트워크는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분권화된 비계층적이고 수평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며, 행위자들의 관계는 독립적이고 어느 정도 자율적이다(푸른 행정학, p.286).

①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이 존재하며, ②④ 정책문제망(이슈망, 쟁점망)은 정책공동체보다 유동적/개방적이고, 갈등이 존재하는 제로섬 게임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푸른 행정학, p.290).

⑤ 이익집단의 다원화와 경쟁 격화는 안정적인 하위정부모형과 같은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출입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위정부모형의 쇠퇴를 가져오고(푸른 행정학, p.287) 정책문제망의 적실성을 높인다.

## 09

④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점증모형은 격동의 장 속에서 정책은 전통·제도·기존 정책을 기초로 한계적 변화를 가져오는 대안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나아가 합의에 의한 결정은 민주주의라는 규범에 부합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기존의 준거틀에 집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이나 정책 환경·목표·가치·문제성격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푸른 행정학, p.332).

① 점증모형은 집단간 권력균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실재의 현실과 같이 강력한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엘리트론이 비판하듯이 소수 집단이 사실상 정책을 주도하고 공공의 제를 왜곡하게 된다(푸른 행정학, p.333).

②③④⑤ Dror는 점증모형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점증모형은 잘못된 정책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고 비판하였다. 즉,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이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한 경직성이 문제된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리모형과 같은 분석적 결정은 비현실적이며, 점증모형이 현실적이라는 주장과 구분해야 한다. 점증모형은 현실적임과 동시에 합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민주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성이 높은 정책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푸른 행정학, p.333).

참고로, 점증모형의 경우, 주장인지 비판인지에 따라 단어의 뉘앙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잘 보아야 한다. 설문의 지문들은 모두 점증모형에 대한 비판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답은 쉽게 나온다.

## 10

③

설문은 네트워크 조직의 개념이다(푸른 행정학, p.498).

① 기능구조는 기능분업위주의 전통적인 조직을, ② 수평구조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을 통합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조직을, ④ 사업구조는 산출물 중심으로 기능을 통합한 조직을, ⑤ 매트릭스구조는 사업구조와 기능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이원구조를 말한다.

## 11

⑤

이번 문제에서 가장 지엽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종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로 개폐하면서 외부의 직접적 감독보다는 내부 감독기능의 강화를 위해 직무평가제를 명시하고, ① 기관장 중심에서 선임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강화했으며, ⑤ 감사위원회는 시장형의 경우 필수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푸른 행정학, p.522).

## 12

③

직업공무원제는 전통적 정부관료제에 적합한 인사제도로, 정부관료제에 종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즉, 공직을 보람 있는 직업으로 알고 젊은 나이(지문 ③)에 공직에 들어가 공직에서 성장하고 상위직에 진출하여 전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인사제도이다(푸른 행정학, p.618).

③ 직업공무원제는 학력과 연령을 제한을 담고 있다.

## 13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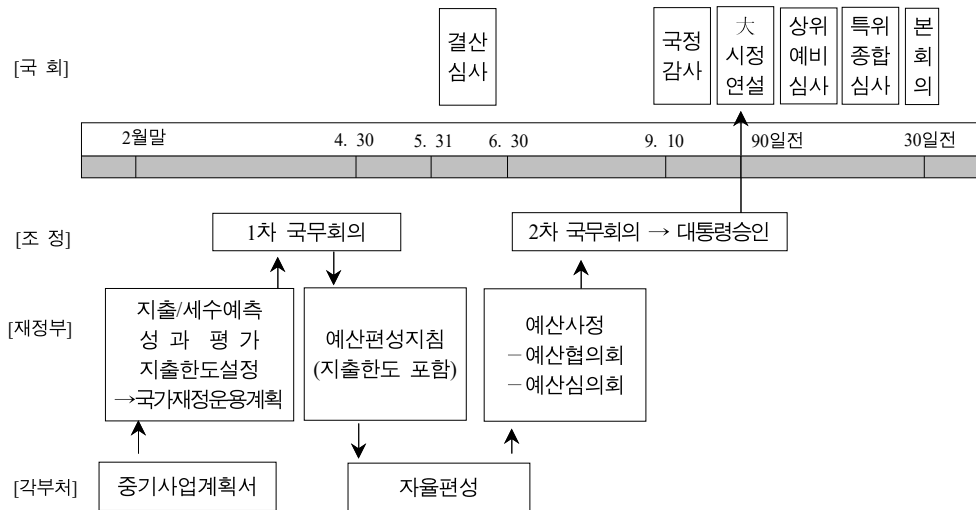
적극적 인사행정은 실적제의 소극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신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계급제적 요소와 업관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적극적 인사행정을 구현한 제도가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다. (1) 적극적 모집, (2) 정치적 임용범위 확대, (3) 인사권의 분권화, (4) 인사행정의 민주화·인간화·사기양양을 강조한다(푸른 행정학, p.617).

③ 신축성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폐쇄집단화 현상을 낳을 수 있는 정년보장형 신분보장을 주장하지 않는다.

## 14

①

예산편성은 (1) 중앙관서 장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2)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각 부처 지출한도의 도출과 국무회의 심의, (3)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 시달, (4) 각 부처의 자율편성과 예산요구, (5)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정, (6)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① 중기사업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푸른 행정학, p.756).



## 05

②

② 명시이월은 미리 국회 승인을 얻은 것으로 사고이월과 달리 사후 승인이 필요 없다(푸른 행정학, p.763).

## 16

①

BTL은 BTO나 BOT 등과 함께, 민자유치 수단으로 ②③④ 민간의 자본 뿐 아니라, 경영기법의 도입이 가능하다. 민간기업이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BTO, BOT)과 달리 수익자 부담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25년간 임대료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도 이에 대한 조세부담을 하게 된다(푸른 행정학, pp.791-792).

## 17

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부패 등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윤리확보 전략이며, 이 제도의 성패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확립에 달려 있다. 내부고발은 공익적 행위로, 도덕적·윤리적 성격을 띠며, 자율적 부패통제 수단이자 다수인의 눈에 의한 상시적 감시 노력의 일환이고, 부패를 내부로부터 상향적으로 해체하려는 노력이다.

내부고발은 고발자는 열악한 지위에 있으며, 비통상적 통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며, 내부 분규해결절차가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⑤ 내부적 이의 제기과 달리 외부적 행위를 특징으로 한다(푸른 행정학, p838).

①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이기적 혹은 이타적) 등을 가리지 않으며, 퇴직 후의 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② 정치적 행위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③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피고발기관이 외부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과 고발자는 익명으로 고발하는 것은 별개다. 부패방지법 상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④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거가 공직사회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18

④

감사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는 헌법기관이다(푸른 행정학, p.850, p.788).

19

①

① 법률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틀린 지문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푸른 행정학, p.935, p.934)

20

⑤

설문은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이다. ② 주민총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안건에 대해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③ 주민발의는 지역의 현장이나 조례, 정책 등을 직접 발의하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부작위에 대해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④ 주민투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푸른 행정학, pp.919-920)